



4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창의 콘텐츠 제작 선도

전주매일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음 2월 11일) 제34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9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선언 및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상용차산업 노조, 도내 상용차산업 관련 16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상생선언식 및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 이끌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용차산업 노조를 비롯한 도내 상용차산업 관련 16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선언식과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및 고용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상생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노사정 상생선언과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에 참여하는 노동자, 기업인 및 전문가 등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했다. 노사정 상생선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구성 및 협력 결의 △상용차산업 노사의 소모적인 갈등 지양 및 생산적 관계로의 전환 △지자체와 전문가의 행·재정적 지원과 상용차산업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 상용차 관련 노사·도내 시군과 상생 선언 노사가 주도, 행정이 지원하는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

마련 등이다.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로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북 금속노조, 한국노총 산하 전북 금속노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타타대우상용차 노조, 사용자 단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타타대우상용차와 관련 협력업체 등이다. 행정기관으로는 상용차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판매·보급 지원 등을 맡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이 함께 하며, 이외에 R&D 등 기술개발과 정책발굴을 지원할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도 구성돼 있다. 추진단에는 정책심의를 담당할 정책협의회와, R&D기반조성, 인력양성, 미래차 보급, 노사상생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개의 분과협의회가 있으며, 정책협의회와 분과협의회 위원은 이날 위촉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상용차산업 전반에 대해 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추진단은 과거와 달리 상호 신뢰속에서 노조와 기업인이 중심이 돼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생협력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행정과 전문가들은 구성원 간 소통과 대화 활성화, 행·재정적 지원, 상용차산업 육성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도내 노사 간 소통협력과 상생발전확대 확신에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노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고, 두 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전북자치도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도지사는 “진정성있는 소통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밝힐 노사정 상생선언을 하게 되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상생의 길을 열었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상용차 혁신전략 추진단을 통해 노사정의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다. 노사정이 함께 상생하고 함께 혁신할 상용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함께 성공을 이뤄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대표 전통명가를 찾습니다’

전북자치도, 2024년도 전북천년명가 참여업체 내달 3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통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도 '전북천년명가' 참여업체를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천년명가는 전통의 맥을 이어 나가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도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및 기업승계자 가운데 전통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전북의 전통명가로 공식 인증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19년 처음 선을 보인 해당 사업은 올해로 6년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46개의 업체가 전북천년명가로 지정됐다. 올해는 1~2차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평가는 서류평가로 신청 업체의 업력, 매출액, 전북을 대표할 지역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 및 진위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업체의 경쟁력, 지속 성장가능성, 경쟁우위 요소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전북천년명가'를 선정한다. 전북자치도는 최종 선정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전북천년명가' 인증현관을 제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경영지원금 1,800만원, TV 방송홍보, 전문 멘토링 지도, 이차보전 연계 특례보증 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천년명가'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ta.kr) 또는 전북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4월 30일까지 신청양식을 작성해 우편, 메일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재난안전산업 발전방안 모색

전북자치도, 올 첫 협의체 열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 현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2024년 첫 재난안전산업 협의체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산업협의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도의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난 관련 행정·연구기관·학계·기업 등 14명으로 지난해 5월 최초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달성을 위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재난안전산업의 추진경과와 올해의 사업추진 계획을 공유했고, 도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윤태 실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전북자치도의 추진방향과 국가 정책 간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먼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침수 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의 1차년도 사업추진경과와 올해 추진할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전북자치도와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지난 2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했고, 협의체에서 숙의한 과제분야를 포함해 과제 선정위원회를 거쳐 도내 특성에 적합한 과제를 최종 공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협의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과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대상자 3000명 선정

전북자치도, 모집인원 대비 168% 접수... 26일부터 수당 지급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의지가 있는 취업 초기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대상자 3,000명을

19일 선정하고, 이날 26일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4개 항목(중위소득, 활동기간, 거주기간, 나이)에 대한 정량평가 및 기존 참여자, 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자는 각 시군 홈페이지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홈페이지(www.lez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급된 포인트는 자기개발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모집인원 대비 168%가 접수하는 등 지역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1개월 남짓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모집인원 3,000명 대비 168%인 5,043명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임·어업, 중소기업

